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8. 17.(수) 10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 박주영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하 (02-2100-2531)
			사무관 오형록 (02-2100-2533)
			사무관 최민혁 (02-2100-2534)

금융규제혁신

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」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

주요 내용

◇ 민간전문가, 관계부처·기관이 참여하는 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*」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

※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

-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음
- 특히, 새 정부는 「디지털자산 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
- 그동안 민간전문가, 관계부처,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」를 출범

◇ TF 운영을 통해 ①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, ②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·과세 이슈, ③디지털자산의 발행·유통시장 규율체계, ④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

☞ 금융규제혁신회의의 36개 추진과제 중 2-5)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
2-5)-17)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, 2-5)-18)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, 2-5)-19)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

1 회의 개요

- '22.8.17일(수), 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」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.
- 금번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, 관계부처·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.
- 제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,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.

■ 일시 / 장소 : '22.8.17일 (수) 10:00~11:30 / 마포 프론트윈

■ 주요 참석자

【민간위원】 학계·연구계·법조계 전문가

【금융위원회】 부위원장, 사무처장, 금융산업국장, 자본시장정책관, 금융혁신 기획단장,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

【관계부처·기관】 기재부 경제정책국장, 법무부 상사법무과장, 과기부 디지털 사회기획과장(대참), 한은 금융결제국장, 금감원 부원장보

- 논의안건 : 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(자본연)
② 디지털자산 규율방향(금융위원회)

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(별첨)

-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,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음을 언급하였습니다.
-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·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였고,
- 6월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, 법무부, 연방준비이사회,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.
- 7월부터는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,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.

- 이번에 출범하는 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」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,
 -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,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 - ②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,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,
 -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③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·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·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 - ④ 마지막으로,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, 보안강화,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
3 주요 논의사항

-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- 먼저,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과 관련하여,
 -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-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, 이용자보호,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협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, 공시 규제,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 -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(DeFi)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(FSB, BIS 등)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,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」 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,
- ①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, ②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·과세 이슈, ③ 디지털자산의 발행·유통시장 규율체계, ④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4 향후 계획

- 앞으로 월1회 「디지털자산 민·관합동 TF」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여
-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·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·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.
- 또한,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·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.

※ (별첨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①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

※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

○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* 및 권리관계**

* 현행법상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식 또는 새로운 권리유형 창설 등

** 권리의 취득·변동·소멸, 제3자 대항력, 담보물로서의 디지털자산 등

○ 도산제도와 디지털자산

* 디지털자산 거래 상대방의 도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의 청산(Settlement) 문제

○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(자금세탁·사기·환치기 등)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·제재 및 소비자 보호 방안

②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 이슈

○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따른 대응방향

*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와 관리,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감독 이슈 등

○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활동에 따른 리스크 검토

○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 도입 전략 등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

③ 디지털자산의 발행·유통시장 규율체계

○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의 규율방안(진입, 퇴출, 영업 규제 등)

○ 불공정거래 방지 등 시장 안정화 방안

○ 투자자 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보호

○ 시장 자율규제 기관 및 거버넌스

④ 블록체인 산업진흥

○ 디지털자산 관련산업의 범위와 유형(블록체인 포함) 및 규율방향

○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·진흥을 위한 정책과제

○ 디지털자산 산업의 인프라 구축방안

*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, 보안 경쟁력 강화, 전문인력 양성 등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	박주영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하 (02-2100-2531)
			사무관	오형록 (02-2100-2533)
			사무관	최민혁 (02-2100-2534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현지은 (02-2100-2652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김연준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권나림 (02-2100-2954)
<공동>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	책임자	실 장	김동환 (02-2100-1733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협 (02-2100-1736)
<공동>	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2732)
		담당자	사무관	이유진 (044-215-2754)
<공동>	법무부 상사법무과	책임자	과 장	임철현 (02-2110-3629)
		담당자	서기관	오유영 (02-2110-3256)
<공동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준동 (044-202-6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창 (044-202-6132)
<공동>	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	책임자	팀 장	박철우 (02-750-6764)
		담당자	과 장	한명진 (02-750-6681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	책임자	국 장	김용태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안병남 (02-3145-7130)

